

김영훈 “메가특구 노동규제 완화 미정… 사회적 논의 거칠 것”

〈고용노동부 장관〉

‘주 52시간 예외’ 속의 시간 강조
노동쟁의 해석 지침 조만간 발표
노동감독관 교육연수원 설립 방침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방 메가특구 주 52시간 예외’ 등 노동규제 완화 여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정부가 노동계 등과의 사회적 논의 절차를 열어 두고 있다며 속의의 시간을 거치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5일 세종에서 언론간담회를 가졌다. 메가특구법 관련 질의에 그는 “정책이 결정난 게 아니다. 확정된 건 아니라는 뜻”이라고 답했다. 이후 유관 부처들과 협의를 진행해 결정하겠다고 했다.

특히 반도체 특별법을 선례로 제시했다. 그는 “특별법에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이 안 들어가면 앙고 빠진 썰렁이”라고 했는데, 지금 그게 아니더라도 엄청난 이익을 내고 있다”며 “너무 (조선시대의) 예송(예절 관련 쟁송)처럼 되면 안 된다”고 말했다.

반도체 특별법 제정 당시 주 52시간 예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정부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 하고 있다. /뉴시스

외가 불포함된 게 산업 경쟁력을 저해한다는 우려가 대두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문제 발생 등은 미미했다는 게 김 장관의 평가다.

또 노사 입장 차는 아쩔 수 없다며 사실 관계에 기초해 합리적 대안을 찾겠다고 했다. 양대 노총에서 이에 대한 대통령 면담 및 사회적 대화를 제안해 움에 따라 노

동계와 소통해 진행한다는 게 김 장관의 정책 방향이다.

앞서 지난달 27일 노동부는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에게 노동 규제를 유연화하는 내용이 담긴 호남권 반도체 메가특구 특별법 추진 방안을 보고했다. 보고에는 노동자가 동의할 시 소득상위 3%인 관리자 및 연구개

발자에게 주 52시간 근로 상한을 얹에는 방안이 담겼다. 특히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 수당을 둔다는 내용이다. 이는 이른바 ‘화이트칼라 이그젠션’(사무직 근로시간 규제 면제) 도입 방안으로 불린다.

양대 노총은 이 같은 규제 완화가 노동자의 과로를 방지하고 메가특구에 ‘안 좋은’ 일자리만 양산할 것이라며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부처 간 엇박자도 보이는 상황이다. 산업통상부의 경우, 이견이 대체로 해소된 상황이라며 막바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김 장관이 노동계 의견을 추가로 듣겠다는 의중을 이날 내비친 것.

아울러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3조 개정안)의 노동쟁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해석 지침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최근 관련 쟁의 범위에 대한 반발이 나오는 상황이다. 삼성전자 초기업노조는 노란봉투법을 근거로, 호남 반도체 메가 프로젝트를 내년 노사 교섭 의제에 올리겠다고 선언했다.

김 장관은 “메가특구는 교섭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정부 측에서 냈었다”며 “사업 경영상의 결정 자체만으로 의무적 교섭 사항이 되지 않는다는 건 명확하다”라고 말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대규모 정리해고나 근로조건 변경 등이 수반되면 마땅히 협의해야 할 사항이다. 혼란이 없도록 구체적인 해석지침을 내리겠다”고 부연했다.

그는 노동감독관의 수사 역량을 끌어올릴 수 있는 교육연수원 설립 방침도 전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됨에 따라 특별사법경찰인 노동감독관의 독자적인 수사가 가능해지면, 별도 교육기관을 통해 수사 역량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김 장관의 언급에 따르면, 향후 노동감독관이 수사 개시와 종결을 판단하고 지청장이 검사 역할을 해야 한다. 노동부는 노동감독관 수사 교육연수원을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을 행정안전부에 전달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metro

기후부, 신설 송전철탑 40% 감축 추진

민가 밀집지역 지중화 확대
선로 경과지 보상·지원책 강화

정부가 송전선로 건설에 대한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민가 밀집지역 지중화 확대를 통해 신설 송전철탑 40%를 감축한다. 또 입지선정 절차 초기부터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선로 경과지 인근 보상과 지원책도 대폭 강화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전력기반센터에서 김성한 장관 주재로 전력망 건설 반대 지역별 주민대표와 제3차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력망 건설 주민수용성 제고방안(안)’을 공개했다.

정부는 우선 최근 발표된 메가프로젝트 등 대규모 전력수요 산업의 지역분산을 통해 지산지소형 전력망 체계로 전환해나갈 방침이다. 특히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호남에 대규모 ESS(에너지저장장치)를 보급해 낮시간 여유 발전력을 저장함으로써 외부 송전 필요성을 완화할 계획이다. 또 지역별 전기요금제

와 전력계통영향평가 등을 통해 대규모 수요의 비수도권 입지를 유도한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첨단산업의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해 이미 추진 중인 국가기간 전력망에 대해서는 주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우선 국가기간망의 기설선로와 병합 및 신설선로 간 통합 구축을 제도로해 신설 철탑 설치를 최소화한다. 기설선로 활용과 신설선로 통합을 추진할 경우 당초 2169km(철탑 4723기)에 달했던 총 연장은 최대 통합 시 1200km(철탑 2509기)로 약 40% 절감될 전망이다.

아울러 후보경과지 내 민가 밀집지역 위주로 지중화 구간을 점차 확대한다. 특정거리 내 일정규모 이상 주민 거주 시 지중화를 우선 추진하는 등의 객관적 기준을 마련해 고시 등에 반영할 방침이다.

또 입지선정 절차 초기부터 전체 주민 대상 사업설명회를 확대하고, 입지선정위원회(입선위) 운영 시 주민 참관을 원칙적으로 허용한다. 주민대표 위원을 대상으로 사전 회의안전 방문설명을 실시하고,

개인정보 등을 제외한 회의자료를 주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선로 경과지 인근 주민에 대한 보상 및 지원책도 강화된다. 경과 지자체 지원금(20억 원/km)이 송전선 피해지역 위주로 지원되도록 세부 지침을 마련하고, 지원금의 3분의 2 이상을 해당 읍면동에 우선 집행한다. 송전선 주변지역의 마을 공동 햇빛 소득 태양광 사업을 적극 발굴·지원하기 위해 한전에 전담지원팀 신설도 검토한다.

특히 전력망 주변지역 주민이 한전 송전망 사업 펀드에 투자할 경우 8~10% 수준의 고정금리를 투자 수익금 형태로 배분하는 ‘계통소득’ 구조를 2027년 상반기 도입한다. 이와 함께 전체 지원사업비에 물가상승률을 연동 반영해 매년 확대 지원할 수 있도록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송주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번 방안(안)에 대해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실무위원회를 통해 조만간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수자원공사, 전사 가뭄대책 점검회의

댐 저수량 관리 등 가뭄극복 총력

늦은 장마와 마른장마, 장기화된 폭염이 겹치면서 주요 댐의 저수량이 급감하자 한국수자원공사가 전사 비상대책본부를 강화하고 가뭄 극복을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섰다.

한국수자원공사는 5일 대전 본사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윤석대 사장을 비롯해 전 부문장, 유역본부장, 관련 부서장 등 총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사 가뭄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정부가 폭염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2단계를 가동한 가운데, 주요 댐의 용수 수급 관리에 비상이 걸림에 따라 마련됐다.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최근 가뭄과 폭염이 지속되면서 용수 수급의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가운데)이 5일 한국수자원공사 대전 본사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전사 가뭄대책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수자원공사

라며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 상황에 대비해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주민 생활과 산업 현장에 용수가 차질 없이 공급되도록 전사적 역량을 집중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해양진흥공사, 중소선사 AI 경쟁력 높인다

해양산업 특화 LLM 개발 추진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중소선사를 대상으로 인공지능(AI)의 수준 진단 및 컨설팅, 현장실증 지원에 나섰다. 중소선사의 AI 전환 지원 확대를 위해, ‘선박 스마트화 진단’ 기법을 처음 도입하고 해양산업 특화 대규모 언어모델(LLM) 개발도 추진한다.

이 같은 계획은 지난달 하순 열린 ‘2026년 제2차 해양산업 AI 전환 실무협의회’에서 확정됐다. 회의에는 SK해운, 현대LNG해운 등 중견선사를 비롯해 중소선사 16개사, 해양 AI 공급기업, LG AI연구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의회에선 중소선사들의 참여를 대폭 확대했다. 해진공은 지난 2023년부터 운영해 온 실무협의체를 확대 개편해 중소선사 실무자의 참여를 늘리고, 최신 AI 기술과 활용 사례를 공유하는 장을 마련했다.

회의에서 해진공은 해양산업 AI 전환 지원 사업과 올해 추진 계획을 소개했다. LG CNS는 AI 전환과 기술 실증·확산 계획을 발표했으며,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선박 스마트화 진단 계획을 공개했다.

AI 공급기업들도 현장에서 활용 중인 기술과 적용 사례를 공유했다. 씨엔티지는 표준화된 해양 데이터를 활용한 선사의 AI 전환 기반 구축 방안을, 씨드로닉스는 AI 센서 융합 기반 자율운항(MAS S)과 스마트 운항 실증 사례를 소개했다. 마린웍스는 선박 관리 디지털전환(DX)·AI전환(AX) 서비스와 기술 동향을 발표했고, LG AI연구원은 산업 특화 대규모 언어모델(LLM) 개발 사례를 소개했다.

안병길 해진공 사장은 “AI 진단과 실증,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 확대해 해양산업 전반의 AI 격차를 줄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

농식품부,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사업’ 강화

송미령 장관, 공급품목 확대 방침 밝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사업’ 관련해 정부의 품질·위생관리 강화 방침을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송 장관은 5일 경기 광주 ‘유기농문화 체험센터’를 찾아, 임산부들과 이유식 만들기 체험을 함께하고 친환경농산물 소비 확대를 위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7월 시행에 들어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사업 관련해, 현장 목소리를 수렴하고자 마련됐다. 이 사업은 임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 꾸러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5일 경기 광주 소재 유기농문화 체험센터를 찾아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임산부에게 전달하고 있다. /농식품부

미를 배송해 출산·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인 수요 확보도

파한다.

송 장관은 체험센터 전시관을 둘러본 뒤 무농약 단호박과 당근 등 친환경농산물을 활용한 아기 이유식용 과자 만들기 체험에 참여했다.

이어 열린 차담회에서는 꾸러미 공급 품목 확대와 품질·위생 관리 강화 계획을 설명하고, 공급업체 준수사항을 위반한 업체에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방침을 밝혔다.

농식품부는 향후 지방자치단체와 친환경농업 생산자, 꾸러미 공급업체 등과 함께 친환경농산물 수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세종=김연세 기자